

LG그룹, 협력기업 현금결제 확대

삼성 의식해 뒤늦게 상생협력 ... 대금 지급조건 개선에 투자 지원도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LG그룹은 8월3일 LG화학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상생협력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중소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회의>를 열고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서브윈 등 10개 주요 계열사의 상생협력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협력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금결제 비중 확대를 통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 방안과 투자 확대를 통한 협력기업의 매출증가 및 인력확보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 LG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면 더 많은 협력기업들이 장비 개발과 소재 국산화 등의 역할을 맡아 참여토록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현금결제 비중 등이 달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도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차 협력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전국 주요 협력기업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800개 정도인 1차 협력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늘려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요구사항을 상생협력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으며, 삼성은 조만간 그룹 차원의 상생협력 종합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04>